

출제유형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3	행정환경	1
인사행정론	3	지방행정론	4

0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 ③ 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
- ④ 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해설 ① [○]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 공공재가 갖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③ [×] 우선 X 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은 강화된다.
 ④ [○]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기존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3,65

▶ (3)

0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는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를 더욱 더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엘더퍼(Alderfer)는 ERG이론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줄여서 생존욕구, 대인관계욕구, 성장욕구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 ③ 허츠버그(Herzberg)는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불만족 요인(위생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만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④ 애덤스(Adams)는 형평성 이론에서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해설 ① [×]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에서는 욕구의 후진적·퇴행적 진행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욕구는 순차적으로 유발되는 것이지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88, 389, 391, 397

▶ (1)

03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현실설명력은 높지만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며 보수적이다.
 - ②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 ③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 ④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해설** ①, ② [○] 점증모형은 합리주의의 기본전제를 완화해 결정자의 의사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하는 결정모형으로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한 방식이다. 점증모형은 현실성은 높지만, 현상유지적 · 보수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③ [×]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모형(총체주의적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점증모형에 입각한 사례로는 품목별예산제도와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있다.
 ④ [○]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점증모형의 타당성이 높을 수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24

▶ (3)

04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 소속형과 행정기관 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
|---|--------------------------------------|

- 해설** ㄱ [○] 옴부즈만은 의회소속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행정부 소속인 경우도 있다.
 ㄴ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하였다.
 ㄷ [○] 옴부즈만은 불법행위와 같이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과실, 태만과 같이 ㄹ [×]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45~747

▶ (2)

0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 ②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 ③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함에 따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을 기관 간 마찰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해설 ① [○] 기관대립형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를 운용해 나가는 방식이다.
② [○]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의 기관에 집중시키는 유형으로 지방의회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단체장은 의회가 선출하거나 의장이 겸하는 방식 등으로 운용해 나간다.
③ [×] 기관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병존되어 있으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기관 사이의 알력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10~812

▶ ③

0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견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 ①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
- ② 집단행동의 딜레마
- ③ 규제의 역설(regulatory paradox)
- ④ 지대추구행위

▶ 해설 규제는 한번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한다. 이를 의미하는 용어에는 규제의 제국건설, 규제의 피라미드, 끈끈이 인형효과 등이 있다.
① [○] 끈끈이 인형 효과(타르 베이비 효과)는 규제행정에서 새로운 규제제도를 도입할 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말로 새끼치기 효과라고도 한다.

▶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3

▶ ①

07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현재가치(NPV)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지만, 편익·비용비(B/C ratio)는 할인율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② 내부수익률은 공공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데 적절한 할인율이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가 서로 다른 단위로 측정되기 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 ④ 비용효과분석은 산출물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거나, 산출물이 동일한 사업의 평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해설 ① [X] 편익비용비는 비용의 총현재가치 대비 편익의 총현재가치이다. 따라서 편익비용비 역시 현재가치를 구해야 하므로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② [O]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부수익률을 통해 사업대안 간 평가가 가능하다.
③, ④ [O] 비용효과분석은 비용편익과 기본논리가 동일하지만 비용은 금전적 가치로, 효과는 측정가능한 산출물단위로 산정하여,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38~243



①

08 정책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미래예측 기법 중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반복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은?

- ① 델파이 분석
- ② 회귀분석
- ③ 브레인스토밍
- ④ 추세연장기법

해설 ① [O]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델파이 기법은 고든(Gorden)과 헬머(Heimer)가 1948년 랜드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법이다. 델파이기법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토론 없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반복·종합하여 예측결과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31



①

09 정부 간 관계(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즈(Rhodes)모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 의존한다.
- ㄴ. 로즈(Rhodes)는 지방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중앙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 ㄷ. 라이트(Wright)는 정부 간 관계를 포괄형, 분리형, 중첩형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지방정부의 사무내용,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 ㄹ. 라이트(Wright) 모형 중 포괄형에서는 정부의 권위가 독립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계층적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④ ㄱ, ㄴ, ㄷ

해설 ㄱ [○] 로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상호의존적 게임의 상황으로 인식한다.

ㄴ [×] 지방정부는 현장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현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재정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을 제정하는 법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ㄷ [○] 라이트는 정부 간 관계모형에서 포괄권위형(포괄형), 분리권위형(분리형), 중첩권위형(중첩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 지방정부의 사무구성,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인사관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ㄹ [×] 라이트의 모형 중에서 포괄형은 정부의 권위가 계층적인데 비하여, 분리형에서는 독립적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68~870

▶ ③

10 훌(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 ① 쓰레기통 모형
-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
-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④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

해설 ② [×] 단절균형모형이란 점증주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시킨다는 예산이론이다.

③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핵심신념에 기초한 지지연합의 상호작용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책학습,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체제 구조의 변화로 정책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모형이다.

④ [○]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따르면 규범적 신념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 정책변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훌(Hall)이 제시한 정책패러다임 변동모형에 따르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로 근본적 정책변동이 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정책패러다임이란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사고와 기준의 틀을 말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75, 626

▶ ④

1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충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적을 때 저충구조라 한다.
 -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있다.
 - ④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 해설** ④ [X] 엄격한 명령계통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통솔 범위를 좁게 설정해야 한다. 통솔 범위가 좁으면, 명령은 통일되어 계통에 따라 전달될 수 있다.

〈계층제의 원리 &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권한체계의 계층화를 요구하는 원리 • 계층제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권위를 통해 수직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 수행 ② 행정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함. ③ 조직의 통일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 ④ 승진경로 제공으로 구성원의 사기양양 등 • 계층제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성원의 소속감과 참여감의 저하 초래 ② 부처할거주의 초래 ③ 계층 수 증가에 따른 의사전달의 왜곡 가능성 ④ 조직의 경직성을 높여 신축적인 조직운영 저해
통솔범위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관의 능률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대상인원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원리 • 피라미드형 조직구조(계층제) 형성에 결정적 작용 • 계층의 수와 통솔범위는 역관계가 성립(통솔범위 축소 \Leftrightarrow 계층 수 증가, 통솔범위 확대 \Leftrightarrow 계층 수 감소)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36, 337

▶ ④

12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 해설** ① [X]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은 제도적 책임성이 아닌 자율적 책임(내재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 ③ [O] 공무원의 행정윤리는 결과주의와 의무론적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과주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며, 의무론은 동기에 대한 평가와 도덕적 원칙을 강조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43, 736

▶ ①

13 「지방세 기본법」 상 특별시 · 광역시의 세율이 아닌 것은?

- ① 취득세 ② 자동차세
 ③ 등록면허세 ④ 레저세

해설 ①, ②, ④ [○] 특별시 · 광역시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③ [×] 등록면허세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세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세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세목체계〉

	구분	특별시 · 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 · 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45

▶ (3)

14 다음 제시문의 ㉠,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과 함께 종속변수인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며, (㉡)는 독립변수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 숨어서 정책효과를 가져오는 변수로 정책수단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요인이다.

㉠

- ①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②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③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④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

-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혼란변수(spurious variable)
 매개변수(mediating variable)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해설 ㉠ :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 혼란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제3의 변수이다.

㉡ : 혼란변수(spurious variable), 혼란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제3의 변수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90

▶ (2)

15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역사적으로 누적 및 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접근이다.
-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공급에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 ③ 공공선택론에서는 공공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 ④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 분권화된 조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설 ① [×] 공공선택론은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이론이다. 하지만 경쟁시장, 자유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 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이란 역사적으로 누적·형성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주의 접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36~138



①

16 「국가공무원법」 상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 ③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외부 적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적격자도 임용할 수 있다.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 수 없다.

해설 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 제3항
 ② [○] 동법 제2조
 ③ [○] 동법 제28조의 4
 ④ [×] 동법 제32조 제1항

동법 제32조【임용권】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8, 465



④

17 조직의 의사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②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 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공식적 의사전달은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참여인원이 적고 접근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사전달체제의 제한성은 높다.

해설 ③ [X] 공식적 의사전달이란 조직의 공식적 통로와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전달이다. 공식적 의사전달은 의사소통이 객관적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조정과 통제가 용이하다. 조정과 통제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에서 나타난다.

〈공식적 의사전달과 비공식적 의사전달〉

구분	장점	단점
공식적 의사전달	① 의사소통이 객관적 ② 책임 소재가 명확 ③ 상관의 권위 유지 ④ 정책결정에 활용이 용이 ⑤ 자료 보존이 용이	① 법규에 의거하므로 의사전달의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되기 쉬움 ② 배후 사정을 전달하기 곤란 ③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한 적응이 곤란 ④ 근거가 남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어려움
비공식적 의사전달	① 신속한 의사 전달 ② 배후 사정을 소상히 전달 가능 ③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긴장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킴 ④ 공식적 의사전달을 보완 ⑤ 관리자에 대한 조언 가능	① 책임 소재가 불분명 ②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없음 ③ 공식적 의사소통을 마비시킴 ④ 수직적 계층화에서 상관의 권위를 손상 ⑤ 조정과 통제가 곤란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17

▶ (3)

18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합의형은 엽관주의를 배제하고 실적제를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② 비독립단독형은 집행부형태로 인사행정의 책임이 분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인사행정의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
- ③ 독립단독형은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의 절충적 성격을 가진 형태로서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인사관리처나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 등이다.
- ④ 정부 규모의 확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중요시 된다.

해설 ③ [X] 독립단독형은 중앙인사기관이 독립성이 있으며, 한 사람의 기관장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인사관리처(OPM), 영국 내각사무처의 공무원 장관실 등은 비독립단독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④ [O] 중앙인사기관은 오늘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강조되면서 더욱 중요시되었다.

〈독립합의형의 장단점〉

장점	⑦ 협관주의의 영향력 배제, ⑧ 실적제 확립, ⑨ 합의제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 ⑩ 중요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음.
단점	⑦ 책임소재 불분명, ⑧ 의사결정 지연, ⑨ 행정수반의 인사관리수단 박탈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어려움.

<비독립단독형의 장단점>

장점	⑦ 책임소재 분명, ⑧ 신속한 의사결정, ⑨ 행정수반의 인사관리 수단을 보유하므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
단점	⑦ 독립성의 결여로 인사행정의 정실화 가능성, ⑧ 기관장의 독선적·자의적 결정의 견제 곤란, ⑨ 기관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인사행정의 일관성·계속성이 결여될 가능성 등이 있음.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62, 463



(3)

19 품목별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 예산제도이다.
 - ②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에 유리한 예산제도이다.
 - ③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 ④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 해설** ①, ③ [○] 품목별예산제도는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의회의 예산심의 및 통제가 용이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유리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② [×]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활동이 아닌 품목별로 분류해 편성하므로 정부활동의 중복방지와 통합·조정이 어려운 예산제도이다.
 ④ [○] 항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출대상별로 엄격히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사업성과 및 생산성 평가가 어렵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73



(2)

20 「지방자치법」 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한다.
 - ②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회의원까지도 소환할 권리 를 가진다.
- 해설** ④ [×] 모든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 대상은 아니다. 지방의회의원 중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36



(4)